

‘새로운미래’ 강령
정강·정책

(2024년 2월 4일)

전 문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었다. 전쟁과 빈곤을 넘어 산업화를 이룩했다. 독재와 폭정을 넘어 민주화를 쟁취했다. 대한민국은 경제강국, 민주강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당당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팍으로 일군 경제성장과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삶은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활기차게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 현재의 정치, 경제, 미래의 삼중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켜야 한다. 어두워지고 있는 위기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살려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환경과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20세기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립과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여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이며,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실력 있는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여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비전을 향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여건을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역량 국가를 건설하겠다. 역량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끔 한다. 역량 국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정과 공공선을 높이며, 효율과 형평의 합리적 균형을 만들 것이다.

둘째, 분단국가, 동맹국가, 반도국가, 통상국가 중의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일차원적 외교가 아닌 중층외교의 관점을 견지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대립 구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민첩하면서도 영민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외교를 추구한다.

셋째, 음악·음식·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문화강국의 면모를 더욱 강화한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문화가 지속적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의 필요 충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추구한다. 우리는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의 사회 보장 원리에 따라 재난·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한다.

다섯째, 명백하게 예고된 저출생·고령화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인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지역·교육·의료·복지 등의 각종 격차를 해소한다. 일·생활의 조화뿐 아닌 역동적 혁신성장의 기초를 유지해 지속 가능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를 만들겠다.

여섯째, 명백하게 예고된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명·재산을 지키는 산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국민적 숙의·공론·합의의 참여 정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겠다.

우리는 위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며, 당내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미래’ 당헌

(2024년 2월 4일)

당 헌

[제 정 2024. 2. 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새로운미래’ 라 하고, 약칭은 ‘새미래’ 라 한다.

제2조(목적) ‘새로운미래’ 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사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 한반도 평화 및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제3조(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새로운미래는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강력한 정당민주주의를 추구한다.

② 새로운미래는 국민과 당원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의 요건)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를 권리당원이라 한다.

③입당·탈당·복당·전적 및 권리당원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
2.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규에 따라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대해 당규에 따라 이의할 수 있는 권리
8. 합당과 해산할 경우 토론권과 투표권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2.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
3.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특별배려) 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를 임명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청년당원에게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②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과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당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기타 당에 특별히 기여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 및 당내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8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당대표 및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③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당대회

제12조(구성) ①전국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책임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상임위원
5. 전국운영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국무위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당원인 자
15. 상임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 ②제1항 제19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당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 ③제1항 제19호의 대의원 중 100분의 50은 여성당원으로 구성한다.
 - ④제1항 제19호의 대의원 중 100분의 30은 45세 이하 당원으로 구성한다.
 - ⑤전국당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 ⑥전국당대회 의장은 전국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권한) ①전국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책임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 ②전국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제1항 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소집) ①전국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②임시전국당대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5조(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전국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전국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책임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상임위원
 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 연구소 차급의 장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0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새로운미래 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전국운영위원
 21. 책임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전국운영위원
- ③ 전국운영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제17조(권한)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대회 기능의 대행
2. 전국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당의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전국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 상임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7.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9.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국당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재위임 할 수 없다.

제18조(소집) ①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구성) ①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책임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대회 의장
6. 전국운영위원회 의장
7.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중앙당후원회의 장
8. 사무총장
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0.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11. 시·도당위원장
12. 당 소속 시·도지사
13.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4.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기구의 대표 1인
15. 당대표가 책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상임위원회 위원

제20조(권한)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규의 제정과 개폐
4. 전국당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5.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6.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회의 승인
7. 책임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8.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9. 전국당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10.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당대회의 승인

12.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3. 임시전국당대회, 임시 시·도당대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21조(소집) ①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책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고문 및 고문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절 당대표와 책임위원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대표 책임위원으로서 당무를 통괄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주요 회의 개최
2.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사항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당대표의 권한, 비서실 구성과 운영, 보좌역 임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대표와 책임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책임위원은 책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자로, 2위 내지 6위 득표자를 책임위원 당선자로 하여 전국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제1항의 2위 내지 6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인 또는 39세 이하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6위 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

다득표자와 39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책임위원으로 한다.

제24조(임기) ①당대표와 책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궐위시 후임자 선출) ①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전국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②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고, 원내대표 유고시에는 선출직 책임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당대표가 선출될 때에도 같다.

③선출직 책임위원이 궐위시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6조(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대표책임위원 및 책임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책임위원회

제27조(구성) ①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및 당무 집행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책임위원회를 둔다.

②책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대표 책임위원)
2. 원내대표
3. 제23조에 의한 선출직 책임위원 5명
4. 당대표가 책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책임위원 2인

③책임위원회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28조(기능) 책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주요 정책과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2.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전국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
4. 의원총회 소집 요구
5.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6. 사무총장 등 책임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7. 책임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8. 임시 시·도당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9.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9조(소집) ①책임위원회는 주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상임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은 책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책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전 당무검증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책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상임고문) ①당대표는 책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상임고문은 당대표와 책임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당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처

제31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로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 직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명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책임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을 둔다.

⑤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책임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책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①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2. 당무검증위원회
3. 사회경제위원회
4. 여성위원회
5. 노인위원회
6. 청년위원회
7. 대학생위원회

8. 장애인위원회
9. 농어민위원회
10. 외교안보통일위원회
11. 지방자치위원회
12. 인권위원회
13. 다문화위원회
14. 예산결산위원회
15. 인재위원회
16. 교육위원회
17. 재해대책위원회
18. 소상공인위원회
19. 중소기업위원회
20.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당무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4조(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상시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대표가 책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책연구소

제35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절 시·도당

제36조(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①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②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책임위원
3. 원내대표
4. 시·도당위원장
5.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③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심의
2. 정국 및 당무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심의
4. 책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권한

④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⑤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시·도당대회) ①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은 제13조에 따른 전국당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③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시·도당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시·도당대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제38조(시·도당대회의 권한) ①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도당대회 소집) ①정기시·도당대회는 정기전국당대회 개최 일 전에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책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40조(시·도당상무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장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5.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시·군·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6.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③ 제2항 제6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41조(시·도당상무위원회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당헌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전국당대회 대의원 추천
4.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2조(시·도당상무위원회 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43조(시·도당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괄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되, 시·도당대회대의원 유효투표를 100분의 50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44조(시·도당운영위원회) ①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③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시·도당 자치규칙 제·개정안의 발의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 사무처는 당원명부의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⑤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7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8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49조(소집)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

으로 하고, 책임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2절 원내대표

제51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원내대표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②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원회나 책임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③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③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⑤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윤리심판원

제53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 당헌과 당규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윤리심판원은 제3장 당기구 및 제4장 원내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4조(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그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국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대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제1항의 심판위원 중 3인은 당대표의 추천을 받아, 2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로 임명한다. 3인은 윤리심판원장이 임명하되 2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한다.

④중앙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윤리규범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6.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7. 당헌·당규에 관한 최종적 유권해석
8.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임명
9. 시·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10.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11.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12. 제33조 제1항 제2호 당무검증위원장 추천
13.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책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제1항과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중앙당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시·도당윤리심판원 구성)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7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시·도당윤리심판위원은 중앙당윤리심판원 의결로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심판위원 중 2인은 시·도당위원장 추천을 받아, 2인은 해당 시·도당 관할 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로 임명한다.

④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시·도당윤리심판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외부인사로 한다.

제57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각급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기소된 경우 그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②사무총장은 위 제1항의 직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해당여부에 관해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무총장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을 해태하는 경우 각급윤리심판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④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각급윤리심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⑥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6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①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 한다.

③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경우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절차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제2절 공직선거기구

제60조(선거대책기구 등)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상임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③제2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④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책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책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의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책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책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전략공천관리위원회) ①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책임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②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③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당대표는 책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 ③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 제65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6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책임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④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책임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제64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책임위원회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과 경선을 거쳐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책임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⑤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책임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후보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책임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있어서 책임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후보자는 해당 지역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③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

여 의견을 개진한다.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책임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있어서 책임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⑦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책임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책임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부터 78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책임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심사기준)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 범죄, 음주운전,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책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경선

제75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당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76조(가산기준) ①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39세 이하)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3.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만 26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만30세부터 만35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하고, 만36세 이상부터 만39세까지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4.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의 경증장애인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②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불문).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 하였거나 타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 하였던 자
3.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제77조(감산기준) ①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20(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산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2. 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 적용한다.

③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선불복경력자 :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2. 탈당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징계경력자 :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제78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 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경선거·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경선거·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시 함께 공표한다.

②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제79조(재심) ①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단,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각 재심위원회는 책임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당규로 정한다.

③ 각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책임위원회는 각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①상임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제81조(재추천) ①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예산과 회계

제82조(예산과 결산) ①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 ③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주요 사업방향
 -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 ⑥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책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⑦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 ⑧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⑥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⑦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8장 당헌 개정 등

제84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전국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85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당대회 의장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당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전국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책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 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④당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87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88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대의원대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에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9조(표결)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③인사, 당헌개정, 상임위원회 표결, 주요 정책입안에 관한 표결은 비밀투표로 한다.

④책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90조(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 및 책임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당 운영과 비상상

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책임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책임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당대회,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책임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91조(합당과 해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당대회 또는 전국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2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채과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93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책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2024. 2. 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4일 개최한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당대표 선출 특례) 당헌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당대표는 2024년 2월 4일 개최한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서 정한 당대표 선출절차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및 특례) ① 당헌 제23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책임위원회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책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헌 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책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 권한을 책임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6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책임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창당대회 이후 첫 전국당대회는 2024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